

5·18 당시 투입 계엄군, 집단 성폭행 사실 등 공식 확인됐다

51건 중 24건 마무리...여고생 피해자 최소 2명
 계엄군, 최소 2회 이상 집단 성폭행 저지르기도
 “반인도적 범죄 문제, 대정부 권고안에 답을 것”

5·18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이 집행을 가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됐다. 행을 가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됐다.



어버이날 길게 늘어난 무료급식 대기 줄
 신들이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어버이날인 8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사랑해 밥차' 효사랑 나눔급식행사에서 어른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거나 지역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오랜 시간 입원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건 51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 51건은 지난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내용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려낸 26건, 자체 제보를 받은 8건을 합친 수다. 조사위는 이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은 여고생이었으며, 이들 중 피해 회복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도 7명에 달했다. 계엄군은 최소 2회 이상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당시 여고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 19일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

엄군에 체포돼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야산으로 추락되는 곳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5월 20일 새벽 언니의 집에서 돌아오던 중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한 B씨는 1982년부터 지역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1988년부터 나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여고생 C씨의 유족과 주변인 등 10명은 C씨가 5월 19일 계엄군에 납치돼 광주 모처 야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18 이후 정신병원을 전전하던 C씨는 1985년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

계엄군 주도 성폭행은 은밀히 이뤄진 탓에 부대 이동 경로를 비롯해 개인별 이동 경로 파악, 내부 고발이 중요 단서로 지목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위는 전체 성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계엄군 2명을 만나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특정 가해자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답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손에 붙들렸다가 광주 상무대에서 사라진 이모(당시 7살)군 등의 구체적인 행적을 찾고 있다. 조사위는 이 군이 5·18 이후 요양시설에 맡겨진 뒤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슬비기자

광주시 엠폭스 확진자 첫 발생...국내감염 추정

광주시·보건소·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시체계 강화·역학조사

국내 엠폭스 감염환자 발생 10개월 만에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생식기에 반점과 수포 증상이 있는 내국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심환자로 신고됐으며, 지난 5일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환자의 최초 증상일은 4월 30일이며, 발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 없이 국내감염으로 추정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현재 전담병상에 격리치료 중이며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의심환자 확진판정과 동시에 거주지 보건소·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긴급회의를 열고 고위험군 접촉자 분류, 역학조사 진행 방향, 감시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접촉자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파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3일 엠폭스 위기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이후 광주시 방역대책반을 구

성·운영하며 엠폭스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달 4일 0시 기준 국내 엠폭스 누적환자는 54명이다. 이날 현재 광주에서는 총 14건의 의심신고가 있었다. 이중 의사환자로 분류된 4건 중 1건이 양성 판정됐다.

엠폭스 임상증상은 주로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피부병변,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생식기발진, 근육통 등이다. 감염경로는 주로 확진환자의 발진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성접촉을 통한 밀접접촉, 확진자의 침구류·식기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엠폭스는 제한적인 감염경로를 통해 전파가 이뤄져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만큼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질병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외교부, 후쿠시마 핵 시찰단에 “가까운 시일 한일 국장급 협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이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5.23-24간 시찰단 파견 관련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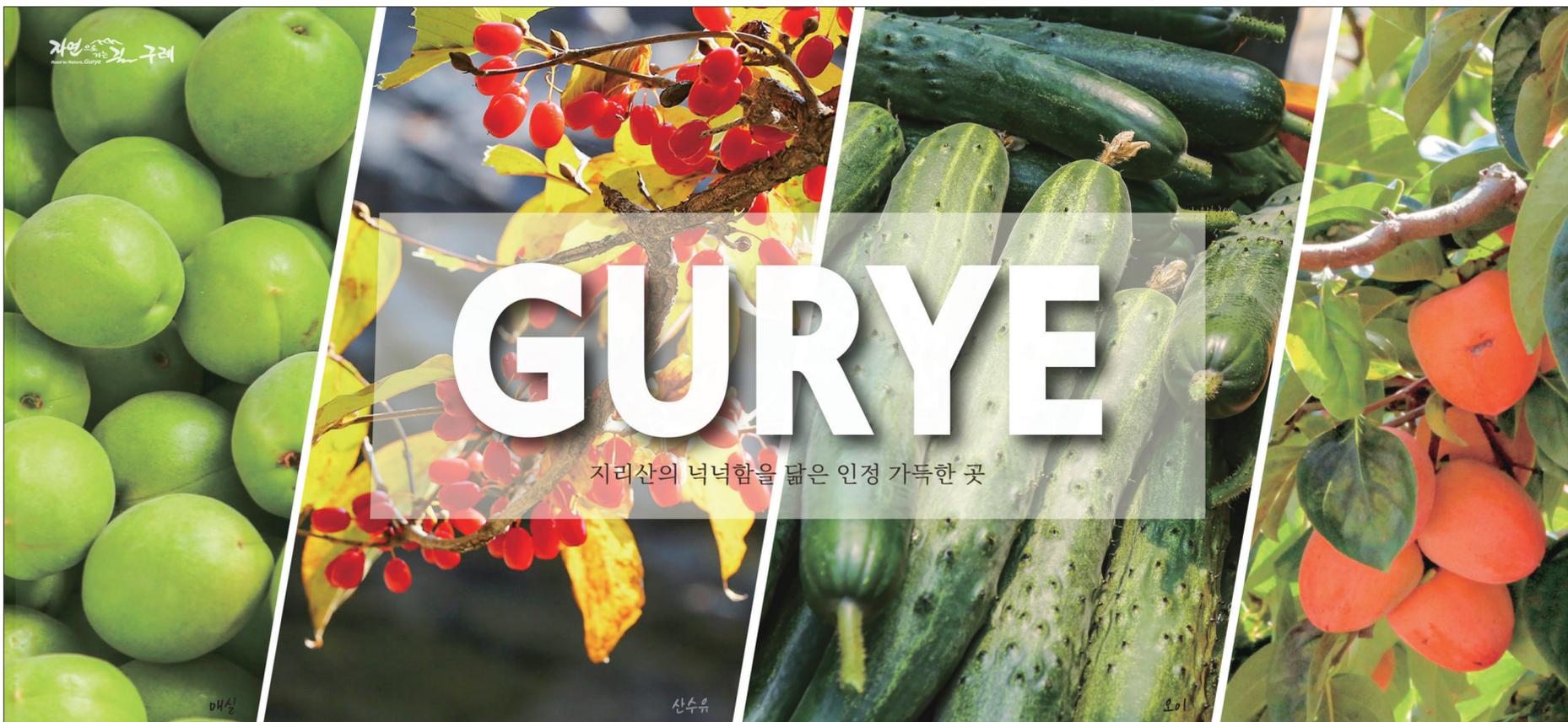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 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염수부터 오염수를 다해중저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수요일입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